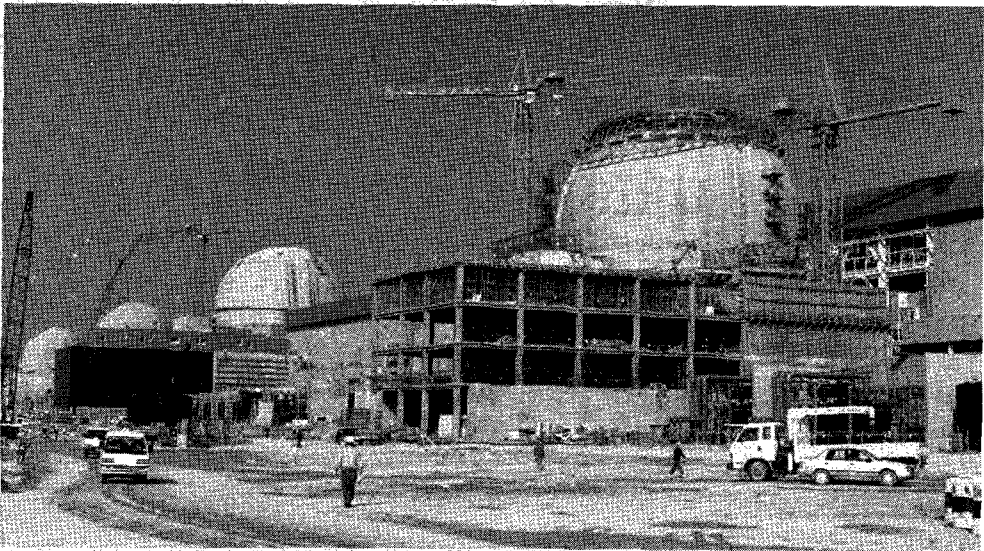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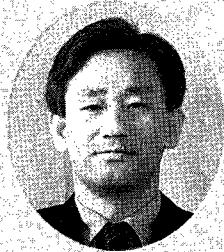
## 우리의 原電, 무엇이 問題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나날이 고갈되어가고 있어 국내 총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난 해에는 93.6%(93년도 상공자원부 발표)나 되었으며 이같은 소비추세라면 금년말에는 무려 9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국



영광원자력발전소



노 윤 래  
한전 영광원자력본부장

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에너지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어 매년 두자리 숫자로 급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비교적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최근에도 전력소비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거의 1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 전기에너지의 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70년대에 추진해 온 탈석유 전원개발정책에

힘입어 原電의 비율이 가장 높아 40%선을 유지하고 있어 원전개발의 효율적 추진이 전력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사업을 둘러싼 정치, 사회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어 이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70년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원전개발이 주춤하게 되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중단될 위험한 요소도 없지 않아 전력정책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원전은 다른 전원보다도 가장 깨끗한 발전방식이란 점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또한 원전 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이 상당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의 안보적 확보란 차원에서 원전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원전사업 추진체제, 안전규제에 관한 행정, 원전의 입지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정책, 대중과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합의(PA) 등 모든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는 장애요인을 빠른 시일 내에 과감히 제거하는 일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원전사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 지면 관계상, 다음과 같이 몇개의 대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임을 전제해 둔다.

### 원전사업 행정체제 및 기능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반에 걸친 장기개발정책과 안전규제에 관한 행정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나마 업무추진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자력법」에 의하면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최고의 심의 및 의결기관은 원자력위원회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 관련 부처의 장관급 공무원(당연직)과 기타 추천에 의한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이는 기능상 원자력위원회에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에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두 기능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용개발 부서의 일부와 안전규제 부서를 과기처에서 분리하여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실무부서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책사항을 동 실무부서에서 차질 없이 집행해 간다면 위원회의 기

능은 활성화 되고 일사불란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고의 원자력기구인 위원회의 기능이 취약하다면 원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과기처 산하 이용개발 부서의 대부분은 에너지 전담부서인 상공자원부에 흡수시켜 일관성 있는 전력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과기처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을 집중 관리하고 산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충실한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행정지원을 하는 등 원자력위원회, 상공자원부, 과기처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기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원활한 원전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유일의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은 발전, 송배전 분야에 걸친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70년대 초부터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회사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원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영상의 문제점이 점차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치 못할 뿐 아니라 원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원부서와의 업무상 갈등과 일반적으로 비대한 조직의 타성에서 오는 방만한 회사운영 등 이른바 성숙한 경영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사업만을 전담하는

原電公社를 설립하여 한전으로부터 원전을 인수 운영하면서 후속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오래 전에 이 같은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原電公社法도 제정된 시기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란 정책적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원전사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날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영국은 전력공사인 중앙 전력청(CEGB)이 1989년도에 원전사업을 전담하는 Nuclear Electric을 분리독립시킨 후 과거의 적자운영에서 탈피하여 92/93 회계년도에는 창사 3년만에 37%의 흑자경영을 기록하면서 Sizewell B로 시작되는 제3기의 경수로 시대를 맞아 원전의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이다.

### 협력업체의 역할분담

또한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협력업체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한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전담하는 기술용역회사, 기기를 공급하는 제작회사,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측의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꾀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 원자력산업의 활성화 방안

예컨대 기계제작분야에서 많은 제작회사가 다양한 기기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A는 벨브만을, B는 펌프만을, C는 복수기(열교환기) 등, 단일 품목의 전문업체를 지정 육성하여 충분한 자금과 기술을 정부에서 집중 지원한다면 국제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기술용역회사의 경우, 韓技가 유일한 원전설계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한 회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韓技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능력을 제

고한다면 국내 원전사업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활발한 사업추진이 가능케 될 것이다.

시공분야인 경우 이미 많은 건설업체가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수준도 국제수준으로 육성되어 있는 만큼 원전사업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기술을 갖춘 시공업체가 국내 원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경험을 쌓고 장치 예상되는 해외 사업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원칙이지만 시장이 좁은 국내 원전사업에 다수의 협력업체가 동일한 분야에서 심한 경쟁을 하다보면 과도한 출혈을 하게 되거나 품질저하를 유발케 되어 원전의 안전에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전문업체를 지도, 양성하는 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 안전규제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관련 안전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과기처 소관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 각종 심사와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과기처에 자문하고 있다.

국내 원전시설에 대한 설계기준과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준칙, 인허가 절차 등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그것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선포한 「IAEA Safety Series No. 75, INASG-4」를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원전에서 인허가를 받려면 건설허가(CP)와 운영허가(OL)의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CP 발급 전에 부지정지와 굴착 등 일부 제한된 공사를 허가해주는 제

도(LWA) 등은 미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행은 예비안전분석보고서(PSAR)의 심사에 따라 CP를 발급한 다음 최종안전분석보고서(FSAR)를 심사하게 되는 약 4년간의 기간동안 실제로는 각 계통의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각종 분석보고서를 심도 깊게 심사할 뿐 아니라 사용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FSAR 심사단계에 와서는 실제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확인이 끝난 상태가 된다.

따라서 FSAR의 심사는 실상 원전 안전확인에 대한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서류(PSAR)가 사장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 따라서 2단계 인허제도를 없애고 처음 발급된 PSAR을 안전분석보고서(SAR)로 하여 심사기간은 물론 발전소의 수명기간 동안 항상 개정 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면 귀중한 기술정보의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FSAR의 폐지로 별도의 OL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원전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미 형식적인 OL보다는 CP 발급 이후 각 계통별, 공사단계별로 구체적인 설계와 공사방법에 대한 분석(해석)보고서를 심사하고 사용전검사와 성능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절차를 밟는 등 1단계 인허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인허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1단계 인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전력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 건설의 짧은 공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주어진 시일 내에 각종 인허가가 발급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은 각종 서류의 미비, 심사기간의 촉박 등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을까? 1972년 국내 최초의 원전(고리1호기)의 CP가 발급된 이후 16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건설중인 오늘까지 잠정적인 공사중지(WS) 또는 발전중지(OL Suspension)가 단 1회도 없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규모가 방대하고 기술관리가 어려운 원전사업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여건으로 한 두건의 Tech Spec 위반이나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WS 또는 OL 중지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규제기관이 Paper Work(심사)에만 치중했지 실질적인 안전규제(Safety Enforcement)는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규제 및 인허가업무는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규제기관은 서류심사가 다소 불만족한 상태라도 가급적 사업자가 원하는 시일까지 인허가를 발급해 주고 그 대

신 건설 및 운영기간을 통해 각종 검사와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업무수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우리의 규제기관(KINS)을 살펴보면 심사업무는 어느 정도 수준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규제업무가 다소 미약한 것은 대부분의 전문직 요원들이 이론에는 밝으나 원전의 공학적 개념이나 현장 경험 등이 부족하므로 이 분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입지선정 및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

---

원전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부지확보이다. 현재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수 있는 부지는 영광과 울진에 각각 2기뿐이다.

오래 전에 정부가 원전후보지를 9개 지역에 지정해 놓았으나 모든 주민들이 「남비」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에는 삼척지역이 원전후보지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이 지역 출신의 대학총장이 앞장 서서 원전 반대운동을 벌였다니 지역이 기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알만하다 하겠다.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원전의 폐기물만이 아니다.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와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원전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량을 줄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폐기물의 80%는 가연성이므로 모든 원전은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운영토록 법적인 규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비가연성 폐기물은 초고압 압축기로 그 용적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성 위주의 폐기물관리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위주의 폐기물관리로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방사능오염이 거의 없는 극저준위 폐기물은 비록 관리구역에서 발생된 것이라도 일반 폐기물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 처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의 양이 근본적으로 감소된다면 처분장 부지선정이 더 어려운 우리 실정에서는 기존 원전 소내에 또는 위의 도표처럼 DMZ 부근의 대단위 단지 내에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자력시설 입지해결의 한 방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시설 입지의 해결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원전입지로 선정하되 이를 대단위 단지로 조성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거의 없어 원전반대운동이 일어날 수 없으며 저렴한 값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좋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으며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이태올로기

투쟁이 없어졌으므로 안보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최근의 외신에 의하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DMZ의 북반부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 않은가? 대단위 발전단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간접투자도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며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북한에 송전하게 될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은가?

또한 사용이 끝난 핵연료는 소내에서 이미 충분히 냉각된 만큼 습식저장이 아닌 건식방법을 택해 장기간 저장하는 것이 저장조의 시설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 그릇된 대중인식

국내에서 반핵운동이 공공연하게 노출된 것은 80년대 후반으로, 6공화국의 탄생을 전후하여 언론의 자유가 충일하고 정치 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 반핵운동을 초기에 주도한 계층은 재야 인사들로서 과거의 정부가 부도덕적이고 정통성이 결여되었다는 시각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원전사업을 하나의 반정부 운동의 목표로 삼

은 것이나, 최근에는 주로 녹색운동을 전개하는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의 주민과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부르짖는 녹색단체들이 반핵운동을 벌이는 것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폐기물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깨끗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인데 그 좋은 예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원전이 모든 발전방식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TMI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설혹 중대한 사고가 원전에서 발생된다 해도 인명피해는 물론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가 손상되었다는

## 지역주민 지원 방안

예컨대, 원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기득권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등차제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대정부 의타심을 없애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대부분의 주민은 지역개발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같은 주민의 요망사항이 국가발전이란 원대한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같은 방향으로 지

원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장학기금에 충당하고 고등학교까지의 등록비를 전액 지원하며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과정의 학자금도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이다.

필요하다면 일정한 범위 내의 전기요금도 지원법 정신하에 감안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원금을 현재와 같이 전부 지역행정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그 일부를 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사업자와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원활한 전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바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전의 최악조건(중대사고)이란 점에서는 두 원전의 사고내용이 유사하나 사고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안전시설이 체르노빌에서는 상당히 취약했으며 TMI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환경단체들이 인식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반대운동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국내의 모든 원전은 중대사고가 설혹 일어날 경우에도 인명은 물론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다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이 끔찍한 재해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원폭피해자의 참상을 보고 원전을 반대하거나 방사선과 관계 없는 약물중독, 영양(특히 엽산)부족, 유전 등에 의한 무뇌아의 출생을 원전의 탓으로 돌리는 반핵운동의 시각을 바로 잡기에는 꾸준한 국민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반핵인사들이 인문 사회학 출신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인식부족이 반핵운동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문제는 원전과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다. 특히 후보지 주민들은 원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므로(원전의 위험성보다는 정든 땅을 버려야 된다는 이주민들의 감상적인 정서불안, 대부분이 농어민으로 전직에 따른 생존권적 위기의식) 가까운 시일 내에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앞서 필자가 제안한 방안(DMZ 부근 동해안 지역의 대단위 부지선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확보된 원전 부지 내에 추가로 후속기를 건설하게 되는 지역(영광, 울진)에서의 반핵운동은 결사적인 반대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전이나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술적 반대인만큼 이에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효율적 원전 PA를 위한 홍보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홍보가 어려운 것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원전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 없으나 예방정비와 예방보수를 철저히 하고 고품질의 부품을 사용하며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각종 절차서의 개발과 안전수칙을 준용하는 정신적 자질을 강화하면 원전은 높은 신뢰도와 이용률을 유지할 수 있어 우수한 발전설비로서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각기 개성이 다르고 원전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 같은 내용을 설명해도 받아들이는 시각이 상이하므로 홍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홍보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 고운 것은 아니며, 어떤 의미로는 원전 PA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원전 PA의 문제

첫째는 원전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복잡한 산업사회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상호 불신의 장벽을 뚫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인데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기에 원전사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의한 홍보로 원전 PA는 담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 홍보활동을 일선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는 계층이 다름아닌 원자력 전문가라는 점이다. 이는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홍보는 전문가보다는 인문사회학 특히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중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원전의 실상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연구·검토하게 하고 직접 대중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통계자료에 의한 홍보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가 항상 일치되어야만 홍보의 신뢰도가 확보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원전의 이용률이 84%였다면 어느 특정 연도의 것인지 또는 국내원전의 평균인지 아니면 특정 호기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이용률의 정의 등을 쉽게 설명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며 그 수치는 모든 인용기관에 관계없이 항상 일치되는 숫자라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중은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감을 갖게 된다.

셋째, 각종 인쇄물에 의한 홍보자료가 생산 배포되고 있으나 실제로 읽는 대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자료가 실상 읽혀지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영화상영, 사생대회, 글짓기, 운동경기 등 문화체육행사를 주관하면서 시사성이 높은 원전홍보를 짧은 시간에 간단명확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원전지역이나 후보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홍보물의 내용을 살펴보

면 주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있어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과 국내 에너지자원의 결핍과 고갈에 따른 안보차원의 에너지확보를 중점적으로 해설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성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묻거나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인용 설명할 수 있으나 일반대중에게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 가격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예상해야 된다.

에너지는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개발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원별 수급전망, 환경보전, 국민의 생활수준 등 사회여건을 고려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전원가 가운데 원전이 가장 저렴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다가 몇년 후 원전 경제성의 우위가 전도될 처지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개발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임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 원자력계의 과제

앞에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국내에서 원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이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원전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전력회사 단독으로 엄청난 자금수요를 풀어나갈 수 없으며 현재의 여건으로 유능한 인력의 적기확보도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첨두부하와 심야부하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이른바 부하율의 개선과 전원간의 균형잡힌 개발과 함께 수요업종간의 요금 조정도 전력회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하나이나, 전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공공재인 만큼 전력회사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불가결한 2대요소는 식량과 에너지라고 한다. 사람도 동물인 이상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질 높은 삶(문명생활)의 영역에 있으며 이는 바로 에너지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에너지 특히 원전으로 대표되는 전기에너지의 현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부족이란 사실이다.

예컨대 국내의 쌀값이 국제시장가격의 400%가 넘고 있으나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주곡인 쌀의 확보를 위해 쌀의 개방수입

을 적극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이해하고 있음에 반하여, 에너지인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10% 정도의 가격상승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소비증가율이 세계상위권을 차지함은 물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극히 나빠 에너지 단정치가 세계적으로 높은 불명예를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성숙한 원자력문화

하루라도 빨리 국내의 전력현황, 특히 원전의 지속적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은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호소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한다.

「新韓國創造」의 가치를 높이 쳐들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깊게 병든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며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일련의 사회개혁을 단행하여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이 솟구치는 이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TV앞에 나와 원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보차원의 전력확보가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전 세계적으로

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과 삼천리 금수강산의 재현을 위해서는 당분간 원전 이외의 대안이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와 「남비」 증후군에 의한 집단시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된다. 동시에 원전을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약속하고 CP가 발급될 때까지는 2~3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역개발을 원전건설에 우선하여 시행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TV만큼 일반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는 홍보매체가 없으므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TV프로도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TV에 연속극, 각종 쇼, 스포츠 등 오락프로가 너무 많이 방영되고 있으며 국민교육과 계도를 위한 건전한 기획물이 너무 빈약한 것 같다. 정부는 유익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기획물을 많이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데 힘써야 되며, 이같은 분위기가 널리 전파되고 성숙될 때 우리나라에서 「原子力文化」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으로 믿는다.